교통약자 AI 배차 지연·출산맘가게 민간위탁 '도마 위'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장애인 서비스 4~5시간 대기
불투명 심사·개소 지연 의혹
폐건물 장기방치 실태 지적도

광주시의회 시정질의에서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인공지능(AI) 배차 지연 문제와 출산맘나눔가게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서용규 의원(민주당·비례)은 14일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의를 통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AI 기반 자동배차시스템이 6억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됐음에도, 대기 시간이 평균 2시간, 길게는 4~5시간에 달해 5~15분 걸리는 일반 택시에 비해 너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교통약자지원센터가 현재 331대(전용차량 128대·바우처택시 202대·다인승버스 1대)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서의원은 △성과급 일괄 균등 분배에 따른 서비스질 하락 △권역별 차고제의 비효율성 △교육·노조활동으로 인한 배차 지연과 대체 인력 부족 △광역이동 서비스의 한계 등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용인구가 23% 증가했음에도 2022년 29분이던 대기 시간이 현재 15분으로 대폭 단축됐다"며 "다만 일부 4~5시간 대기도 있다는 것이 현실인 만큼 배차 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성과 차등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고, 바우처 택시 예산 부족분은 재원 부족을 추경을 통해 해결하겠다"며 "교육 등으로 인한 지연 문제는 시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우니 적절하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노 의원(서구3)은 출산맘나눔가게 1호점 민간위탁 사업 선정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늦어진 공모 결과 발표, 개소 지연, 불투명한 심사, 검증되지 않은 법인, 심사위원 평가 등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했다.

이에 강 시장은 "공모사업에서 탈락한 업체가 승복하지 못하는 문화가 행정을 오해하게 만든다"며 "출산맘나눔가게 1호점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 절차에 대해 (탈락 업체가)자꾸 문제를 제기하면 행정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광주시 민선 8기 공약인 'Y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총사업비 416억원을 들여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꿀잼 라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찰은 이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탈락업체 측이 제기한 의혹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실무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관련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음에도 탈락 업체의 의혹 제기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만을 다시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또 옛 서진병원, 신양파크호텔, 국군광주병원 옛터 등 광주 폐건물이나 장기 방치 건물의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서진병원은 사유지로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고, 신양파크호텔은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군광주병원 부지는 국가 주도의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길용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이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참석해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차영수 도의원 "영산강 하굿둑 개방, 지역경제 활성화"

해수유통 로드맵 마련 촉구

영산강 하굿둑의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 복원과 수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강진)은 제392회 임시회 전남도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영산강 하굿둑이 건설된 이후 강과 바다가 단절돼 하류 수질이 악화하고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 주도의 타당성조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남도가 직접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개방 구간을 설정하는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산강 하류수질은 하굿둑 건설 이후 농업용수 기준 COD 4등급, 총질소·총인 6등급 수준으로 악화돼 생태계와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차 의원은 "낙동강은 지자체가 먼저 움직여 수문을 개방해 하구 생태계가 복원됐다"며 "전남도 자체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 해수유통 구간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어 "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수산업, 농업, 생태계 모두를 살리는 전남의 생존 전략이다"며 "전남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할 때 비로소 영산강 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특히 "현재 환경부와 협력해 영산강 하구 해수유통 타당성 조사와 단계적 실증 시범 개방을 계획중이고 국립 영산강 하구관리센터 설립과 운영, 하구 복원 종합계획 수립 등도 검토·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영산강 생태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근산 기자

김정이 도의원 "자립청년 정착, 맞춤형 지원을"

공동체 모델 등 제안

전남지역 자립청년들이 보호종료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체 모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8)은 제392회 임시회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보호종료 청년에게 수당과 주거지만 제공한다고 자립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서 선·후배가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정착할 수 있어야 진짜 자립이다"고 강조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의 2023년 정책연구에 따르면 도내 자립준비청년의 41%가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말 기준 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 1,100명 중 450여명이 일자리를 찾아 전남을 떠난 것이다.

김 의원은 "2025년 기준 자립청년 유출 규모에 대한 공식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며 "정착이 정책 목표라면, 그들이 머물 이유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올해 새로 도입된 '바람개비 서포터즈'는 자립청년들이 서로 연결되고 정착의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공동체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보를 나누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은 스스로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배워갈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동체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자립청년이 전남에 뿌리내리고, 후배의 손을 잡아주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년들의 소득, 고용형태, 생활여건 등을 촘촘히 모니터링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폐지수집 어르신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 제공

작년 첫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올 8월 한달간…20만원 수당

광주시가 폭염에 취약한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한 자원재생활동단을 운영한다.

자원재생활동단은 시가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한 제도로, 어르신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무더위 안전 일자리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참여자들의 의견과 수집 구역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 폐지 수집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무더위 시간대 '폐지 수집 금지 시간'을 운영, 폭염 예방 효과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 어르신들은 오는 8월 한 달 동안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폐지 수집을 중단하고 실내나 그늘 아래에서 환경정화 활동이나 재활용품 선별 등 비교적 안전하고 무리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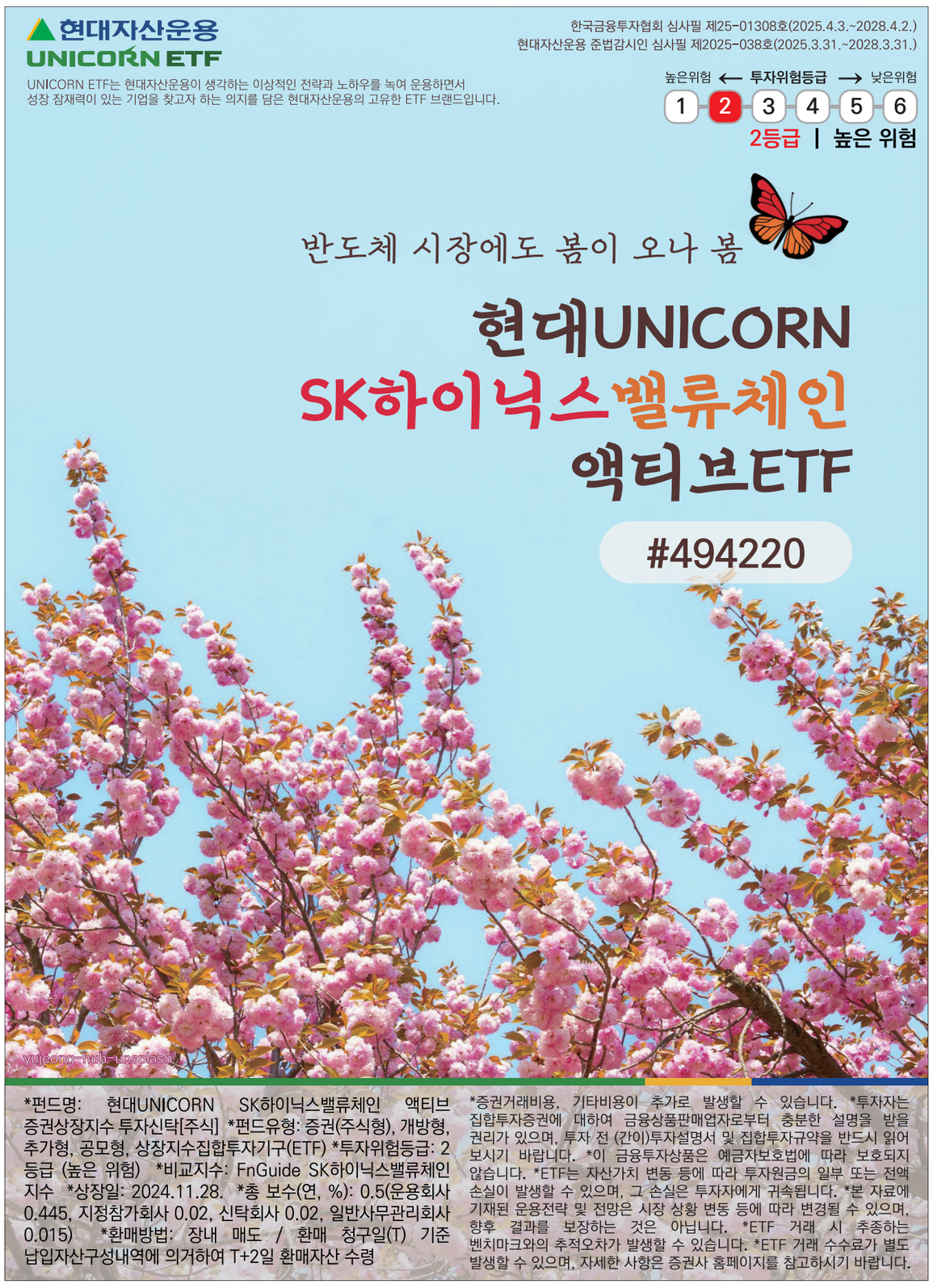
시는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도움을 위해 안전교육과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고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폐지 수집 어르신 600여 명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차양모자, 형광토시, 쿨링물티슈, 쿨타월, 쿨파스, 벌레약, 폭염 행동요령 안내문 등이 들어있는 보호용품 꾸러미를 배부해 어르신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미경 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도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촘촘히 살피겠다"며 "무엇보다 물, 그늘, 휴식이 곧 최고의 폭염 안전 수칙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승한 기자

광주소방, 파라과이 자위소방대 교육·장비 지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4일 "지난 6월27일부터 7월5일까지 파라과이 현지에 파견된 교육훈련단 6명이 자위소방대원 42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무사히 귀국했다"고 밝혔다.

교육훈련단은 광주소방의 선진 소방기법과 재난 유형별 대응 방안을 전수하며, 파라과이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능력과 응급의료 서비스 수행 역량 향상에 기여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18년부터 펌프차, 구급차 등 총 49대의 소방차를 파라과이에 지원해왔으며, 올해도 소방차 6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길용현 기자